

# 李 “골든타임 허비 안돼… 공공요금 동결·차등 지원 검토”

“밤새서라도 신속한 추경 편성” 당부  
유류세 인하·농업인 유가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사태가 국내 영향을 주는데 대해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며 “추경(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 신속 투입도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게 양극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것저 것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이 다양하다. 직접지원, 간접지원, 조세 지원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추

세적으로 양극화·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똑같이 쳐우하면 사실은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재정 지출 방법도 있는데 (양극화)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긴 한데 이걸 보고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꼭 필요한 데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점을 고려해 정책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 농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공요금을 동결해 지갑이 얇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어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일부 제품 가격을 내달 출고분부터 인하한다는 소식에 대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사실 기업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또 서민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민주 국정조사 추진에 국힘 특검 ‘맞대응’

與,尹정권 조작기소 의혹 본회의에  
野,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쌍방을 대복송금·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을 7개 핵심 사건으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의힘 등과 국정조사 실시 및 계획서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를 마친 뒤 국조특위도 구성해, 이르면 이달 말쯤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내부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이 돌고 있다는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내용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당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법안을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을 향해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공소 취소 외압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명히 탄핵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주도로 보고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식’ 국조가 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리스크 대응 상황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당정, 중동상황 여파 에너지 대책 협의

“원전 가동 조기 복구”

당정이 12일 중동 상황 여파 속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원전 조기 재가동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원전 가동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이 크다”며 “국내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스 수급은 큰 문제가 없지만 유가에 가스 가격이 연동돼 있어 가격은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 문제 근본 대책은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와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

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GW까지 늘리는 것인데 가급적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압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갈등 해결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가격 체계 개편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리스크를 점검했다”며 “전력수급 차질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에 철저한 비상대응 태세를 주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며 ▲에너지 대안반 가동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등 정부 추진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당정은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미통상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 높아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25% 재인상 카드를 철회해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약 518조38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특별법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법 미처리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까지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는데, 이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특별법을 넘겼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통과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예진 기자